

북한 인터넷 마비시킨 美 해커의 '사적 복수'

에스프레소



변희원
테크부 차장

북한과 온라인 교류를 하는 이들이 많이 늘어나 알려지지 않았지만, 2년 전 북한 전역의 인터넷이 마비된 적이 있었다. 2022년 1월 26일, 북한 정부 공식 포털 '내나라'를 비롯해 외무성·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고려항공 등 주요 기관 사이트가 분산 서비스 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받아 장애가 발생했고 북한을 오가는 모든 인터넷 트래픽이 끊겼다. 영국의 한 정보기술(IT) 전문가는 로이터통신에 "북한의 IP 주소에 접근하려 했을 때 데이터를 북한으로 전송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다"고 했다. 일주일 넘게 지나서야 완전히 복구됐다.

시도한다. 사이버 보안 회사를 운영하던 카세레스도 공격 대상 중 하나였다. 북한 해커들을 막아내긴 했지만 그는 정권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공격을 정부에 알리기 위해 미 연방수사국(FBI)과 정부 사이버 보안 관계자들을 만났다. 공격 상황을 다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정부에 실망한 카세레스는 혼자서 북한에 양값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와이어드에 "만약 우리가 이를 드러내지 않으면 북한은 계속 (해킹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한 개인이 국가 정권을 향해 감행한 복수가 성공했고, 아직까지 보복도 당

북한 해커에게 공격당하자
北 기관 먹통 만들며 사적 복수
하지만 혼자선 아무래도 역부족
온라인 정의 이팔 시스템 대응을

하지 않았다. 만약 카세레스의 사적 복수를 한국 드라마로 만든다면 '사이더복수극'으로 흥행했을지도 모른다. 지난해 가장 화제가 됐던 드라마 '더글로리'는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응징을 다뤘고, 사적 복수를 대행하는 조직이 등장한 드라마 '모범택시'도 인기로 합입어 시즌2까지 제작됐다. 웹툰으로 이름을 알린 드라마까지 만들어진 '내 남편과 결혼해줘'도 전형적인 사적 복수극이다.

사이더의 맛이 어떤지 떠올려보자. 처음에는 허끝을 톡 쏘는 듯 시원한데 몇 모금 마신 뒤에는 목구멍에 달짝지

근한 맛이 들러붙어 오히려 감증이 가시질 않는다. 사적 복수는 사이더의 시원한 첫맛보다는 씹 씹해지지 않는 뒷맛과 더 달았다. 더글로리의 문동은(송혜교)은 복수하기 위해 교사가 됐지만, 정작 그가 교사로서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은 없다. 그가 복수에 골몰하는 동안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학교에선 제2 문동은과 제2의 박연진(임지연)은 계속 생겨나고 있었을 것이다. 사적 복수의 '사' (私)는 말 그대로 '공' (公)의 반대말이다.

사이더 복수극이란 같은 장르 안에서 카세레스는 문동은과 다른 결말로 향해 가고 있다. 사적 복수를 완수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온라인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만들고자 나섰다. 그는 "러시아의 랜섬웨어 공격자들이 작년에 병원과 정부 기관을 마비시켜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 이상을 갈취했고, 북한의 해커들은 작년에만 10억달러 상당의 암호 해폐를 훔쳐서 북한 정권의 금고에 돈을 넣었다"고 지적했다. 카세레스는 지난 2년간 미 정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과 같은 해커로 구성된 사이버 안보 특공대를 조직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왔다. 온라인 공격의 위험성을 세상에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 언론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사이버 보안 시스템은 변한 게 없어 사이더 같은 결말을 맺지 못하고 있다. 짧은 시간에는 어렵겠지만, 이 복수의 엔딩은 부디 공적(公的)으로 통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26]

투표의 중요성

'투표'란 글자 그대로 '표'를 던진다'는 뜻이고, '표'는 증거가 될 만한 종이를 말한다. 오늘날에는 '투표'를 '선거'와 동일시하지만, 사실 선거에 종이를 쓴 건 근대 이후 일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도끼 편편을 썼고,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구슬을 썼다. 미국에는 지지하는 후보 이름을 부르거나 그 앞에 줄을 서는 식의 허술한 방법이 있었다.

미국 화가 조지 케일럼 빙엄(George Caleb Bingham·1811~1879)의 '지방 선거'는 오늘날과 사뭇 다른 당시의 선거 현장을 낱알이 보여준다. '국민의 뜻이 곧 최고법'이라고 쓴 파란 깃발을 세워둔 투표소 앞 문전성시다. 유권자들은 하나씩 계단을 올라 중복 투표

가 아니라 선서를 하는데, 바로 옆에서 검은 톱헤드를 들어 올리며 웃는 낯으로 용지를 내미는 이가 있다. 당시에는 각 정당에서 용지를 따로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것. 그렇게 지지하는 정당 표를 제출하다 보니 비밀선거도 아니고, 금권 선거와 부정투표 시비가 잦았다. 아나나 다름과 투표장 앞에서는 신문을 읽거나 진지하게 토론하는 이들 가운데 버섯이 술판이 벌어졌고, 이미 만취해 인사불성인 사람을 억지로 세워 안고 줄을 선 이도 보인다. 제정신이 아니어도 정당 표판 내면이니 벌어진 일이다.

화가 빙엄은 '지방선거'를 비롯해 투표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그림들을



조지 케일럼 빙엄, 지방선거, 1852년, 캔버스에 유채, 96.5×132.1cm,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미술관 소장.

표표했다. 사실 그는 미주리주 하원의 원으로 출마해 세 표 차로 당선됐으나 상대 요구로 재검표를 했다 낙선한 경험 있다. 그는 2년 뒤 다시 출마해 낙선한 표 차로 승리를 거둬 화가로서 드물게 선출직 정치인으로 활약했으니, 가벼운 용지 한 장의 위력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실감했을 터였다.

포스트백 교수·서양미술사

社 說

北 노예 노동으로 만든 수산물이 우리 밥상에 오른다니

북한 주민들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한 중국산 수산물이 우리 밥상에 오르고 있다. 미국 비영리단체가 방문 조사한 중국 단둥의 수산물 가공 공장 3곳에서 파악한 물량만 2020~2022년에 420t이었다. 북 노동자 400여 명이 손질한 이 수산물은 모두 중국 다롄항에서 부산항을 거쳐 전국으로 유통됐다고 한다. 품목은 바지락, 오징어, 명태, 우렁이 등으로 다양했다. 한국 소비자들은 이 제품들에 '껍데기 없이 살만 있어 먹기 편하다'는 리뷰를 달았다. 제3국이 북 노동자를 고용하는 일부터가 유엔 제재 위반이다. 이들이 벌어들인 돈은 김정정은 정권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쓰인다. 한국 소비자들이 부지불식간에 한국민을 살상할 무기 개발을 돕는 셈이다.

국내에 유통됐다는 수산물 420t은 빙산의 일각이다. 중국엔 이런 수산물 가공 공장이 수십, 수백 곳에 이르고 여기서 일하는 북 노동자 규모는 파악조차 쉽지 않다. 북 노동자를 훨씬 많이 고용하는 분야는 섬유·봉제 쪽이다.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서 수만 명이 일한다. 러시아에 파견되는 별목공을 비롯해 건설 노동자, IT 일꾼, 식당 종업원 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외화를 번다. 모두 합치면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7년 말 북 노동자 송환을 의무화한 유엔 결의가 채택됐지만 중국 러시아는 무시한다. 노동 비자 대신 학생, 관광, 기술 연구 비자를 발급하는 수법을 쓴다.

중국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현실은 노예 노동 그 자체다. 제일 먼저 여권을 압수당한다.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루 15~18시간 근무는 기본이다. 컨테이너 등 더위와 추위

에 그대로 드러난 곳에서 산다. 좁은 곳에 함숙시키며 서로를 감시하게 한다. 여성 노동자들은 성적으로 학대당한다. 러시아 별목공으로 탈출한 사람은 "집승처럼 살았다"고 증언했다. 월급은 지역·업종에 따라 200~3000달러다. 이 중 80~90%를 전쟁 준비 자금, 충성 자금, 세금·숙식비 명목으로 북한 당국이 원천 징수한다.

그래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해외 파견 노동자가 선행 대상이다. 당국이 임금을 아무리 많이 때 가도 돈벌이가 아예 없는 북한 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그나마 해외 문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노예 노동에 선발되기 위해 뇌물까지 준다. 북한 당국은 이를 이용해 가혹한 노동을 강요한다. 착취를 못 견디고 도망치거나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한다. 올 초 중국 지린성에선 북 노동자 수천 명이 북한 당국의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파업과 폭동을 일으켰다.

북 주민의 노예 노동으로 생산한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은 인도주의와 인권 측면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을 하루빨리 파악해 판매·수입·유통을 금지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 5·24 제재 등 근거는 너무나 많다. 외국 비영리단체도 파악한 사실을 정부 당국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부터 부끄러운 일이다. 북 노동자를 고용하는 해외 기업들을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미국, 캐나다, EU, 노르웨이 등은 이런 기업들을 '인권침해자'로 규정해 입국 제한과 자산 동결 등 표적 제재를 가하는 '마그니츠키법'을 이미 도입했다. 한국만 마그니츠키법을 22대 국회에서 논의했으면 한다.

기업 사외이사 제도, 정·관계 로비스트로 변질되고 있다

남구준 전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이 '사교육 카르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임시학원 기업 메가스터디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알려졌다. 수사 대응용이란 의혹이 크지만 남 전 본부장은 어떤 해명도 없이 사외이사 직을 유지하고 있다.

사외이사는 외환 위기 이후 대주주의 경영 독단을 견제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상법으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경영 전문가 대신 관공서, 고위 관료, 국제정 등 힘 있는 기관 인사를 뽑아 로비스트나 바람막이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 지난 3월 주총에서 30대 그룹의 71사가 사외이사 103명을 추천했는데, 이 중 40%가 법조계·관료 출신이었다.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삼성그룹은 신규 사외이사 18명 중 13명(72%)을 전직 판검사·관료들로 채웠다.

이렇게 선임된 사외이사들은 경영진 견제와 투명 경영이라는 본연의 의무는 외면하고 100% 찬성하는 '거수기'가 됐다. 전문성이 없으니 경영 이슈를 판단할 수도 없다. 그 대가로 고연봉과 각종 혜택을 누린다. 100대 기업의 사외이사 평균 연봉은 8042만원에 이른다.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들이 전세기를 타고 식비로만 1억원을 지출하는 호화 여행을 한 것이 한 사례다.

삼성전자의 경영자인 대만 TSMC의 사외이사 6명 중 5명은 브리티시텔레콤 전 회장, 인텔 전 부사장, MIT 전 총장 등 세계 최고의 IT·반도체 전문가들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사외이사 6명 중 IT 전문가는 1명뿐이며, 전직 관료와 금융인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사외이사 구성으로 어떻게 주주 가치를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나.

"한국이 북한보다 못한 무역 적자국"이라는 이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선거 유세에서 "한국이 (윤석열 정부 이후) 1년 10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북한보다 못한 무역 적자 국가가 되고 말았다"고 되풀이 주장했다. 또 "외환 부족으로 다시 외환 위기를 겪게 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은 작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반도체와 대미(對美) 수출 증가로 10개월 연속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윤 정부 초까지 반도체 경기 침체와 대중(對中) 수출 부진으로 무역 적자를 봤지만 지난 얘기다. 이번 달 외환 보유액도 4192억달러로 세계 9위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에 서민 경제가 어렵지만 무역 적자와 외환 위기 주장은 근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과 반대다.

한국이 북한보다 못하다는 말은 황당하다. 지금 세계에서 국민이 굶어 죽는 나라는 북한 등 극소수 몇 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이 그런 나라보다 못하다는 얘기는 과장의 차원을 넘어섰다.

세계 10위권 경제국인 한국을 북한과 비교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북한도 무역을 하지만 한국의 작은 기업 한 개의 수준이다. 2022년 수출은 1억5900만달러, 수입은 14억2661만달러로 무역 적자가 12억6761만 달러였다. 무역 적자가 수출의 8배다. 또 무역의 96.7%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통계상 경제 규모는 한국의 60분의 1이리지만 실제로는 수백분의 1일 것이다. 무역 규모는 400배 넘는 차이다.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아무리 선거가 임박해 아무 말이나 한다고 하지만 이 대표 주장은 귀를 의심케 한다.

이 대표는 국회 입법권을 독점해 온 과반 다수당 지도자다. 이번 총선에서도 독자 과반이 유력하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경제 상황과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다. 우려할 일이다.



동영상 시청

4.10 총선 D-1

진영주의 패거리 수령에 빠진 정치판

나쁜 짓 해도, 범죄자여도... [우리편]이면 무조건 찍는다... 이게 한국 민주주의 수준?

[재든] 위든, [예든] 예든... 나쁜 건 나쁘다 해야 이 모두, 선전·선동에 세뇌된 탓 국민 하나하나가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 돼야

<참여연대>까지 입 닫고 있을 수 없을 지경

언론은 전한다.

"<참여연대>는, ... ※ 22대 국회의원 야당 후보자들(양문석 공영은 양부남)과 여당 후보자(장진영)의 ★편법 대응 ★개발 예정지 주택 매입과 증여 ★부동산 개발업법 위반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이 이들이 국회의원 이 될 경우, ★부동산 투기 ★주거 불평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고 비판했다." (문화일보 2024/04/05)

다른 언론은 또 이렇게 전한다.

"[외화대생 미군 장교 성상남] 발언을 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벌 총수 술자리] 논란과 관련해 그를 연산군에 비유하며 [연산 시절에 스와핑이 많이 있었다]." (경향신문 2024/04/04)

어쩌다, 왜 이 지경까지...

여당 야당을 막론한 정치인의 도덕적 의혹에 대해서는 양쪽이 같은 말을 해야 정상이다. 이러자면 국민 하나하나가 진영논리에 매이지 않고, [독립된 개인]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풍토는 그렇지 못하다. 국민 전체가 진영논리에 요지부동으로 잠겨있다. 어떤 불미스러운 의혹을 받아도 어떤 외설적 폭언을 해도, 그가 [우리 편]이면

무조건 편들어줘야 한다는 식이다. 왜 이렇게 되었나?

[대한민국 체제 안이란 준칙]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선 좌(左)도 우(右)도, 정책 방향은 서로 달라도 ☆[자유 체제의 준칙]만은 ☆[공존의 틀]만은, 다 같이 준수해야 한다.

우를 해도 [대한민국 헌법 체제 안에서] 해야 하고, 좌를 해도 [대한민국 헌법 체제 안에서] 해야 한다는 준칙 말이다.

[패거리 정치] 만드는 세력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이 준칙이 산산이 조각났다. [대한민국 +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 자체를 없애 버리겠다는 [극좌 전체주의 일당독재] 세력이 득세한 탓이다.

문제는, 이 [한국 내전(The Korean Civil War)]의 본질을 일반 대중이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다수 대중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선동꾼들의 강성 팬이 되었다. 이 군중 [매법]은, 그들의 스타가 어떤 역겨운 스캔들의 당사자일 지라도 "그가 뭘 잘못했느냐?"며 거품을 문다.

이런 흥위병 판임에도, 그동안 좌(左)로만 알려진 <참여연대>가 그쪽 정치인들의 일탈(逸脫)까지 예의 없이 나무란 것은 그래서 특기할 만했다.

우리 수준이 겨우 이 정도?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그나마 남은 집단지성은 여야와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정치란 마패(馬牌)만 들이대면 염치, 수치, 죄의식, 준법(遵法)을 휴지 쪼가리처럼 내뺄개쳐도 면피부를 쥐야 하나?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지, 한 재선 의원은 이런 투로 말했다

"지역에서 그들을 끌어내리라는 요구가 없었던 것은, 그 영향이 별로 크지 않았다는 뜻이다." (국민일보 2024/04/04)

이게 우리 대중민주주의가 도달한 수준이란단다. 1960년대 서영춘의 코미디 제목 그대로, [우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

1류 근 일 뉴데일리 논설교수 / 전 조선일보 주필

뉴데일리 칼럼 더보기

류근일 칼럼: 대한민국, 김어준에 농락 당할건가

김어준의 의심스런 여론조사, 왜 폭언했나... 마영 사용 기법조사, 왜 중단시켰나?

newdaily.co.kr 뉴데일리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4월 6일 게재 되었습니다.